

국가부패유형과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

-Peter Evans의 국가유형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An Influence on Nation Competitiveness of Nation Corruption

-In Focus on State Distinction of Peter Evans-

서인석(Seo, In Seok)* · 권기현(Kwon, Gi Heon)** · 이동규(Lee, Dong Kyul)***

ABSTRACT

This study as follows to propose the problem decreasing corruption is suggesting as core issue in global dimension without developed or non-developed nations. This is because corruptions are not only between a sort of deviation and problem creating non-developed countries but also problem relating to govern every nation involving developed countries(yuen, 2002: 72). That is, national corruptions decrease national reliability, which is able to between give unreliability about nation and low nation capability to a people. In this context, this paper is focusing on research related to Nation's Competitiveness influenced by nation's corruption. A certain corruption influences a specific nation, which is significant applications. Moreover, specific corruptions embeds national contexts(or social contexts). This study will look for, firstly, Developed counties type has appe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 term variables, which was both education corruption and parliament corruption. Secondly, South American countries type has emerg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 term variable, which was police corruption. Finally, East Asia countries type has occurred interaction term variable, which was NGO corruption. As a result, research results are match to Peter Evans(1985: 191)'s "state autonomy", which is theoretical conceptions discussed as Predatory Autonomy, Third Autonomy, and Embedded Autonomy. Just, Predatory Autonomy is not considered to my research because samples of Africa countries involved to Predatory Autonomy are deficient.

Key Words : 부패(Corruption), 국가경쟁력(Nation's Competitiveness), Peter Evans 국가자율성(Peter Evans's state autonomy)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행정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1. 서론

국제투명성기구 및 국제경제개발원을 비롯한 세계국제기구들은 부패지수를 측정하여 국가별 부패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부패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부패의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부패가 단지 일탈의 한 유형 혹은 저개발국에서만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며(윤태범, 2002: 72), 따라서 이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봉착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H. Lasswell, 1951: 8-9; 1970: 5, 11-12)로써 보다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탐구를 요하는 정책문제(권기현, 2007: 30-35)라 여겨진다. 또한 많은 선진국들과 국제경제기구들은 국제 간 상업거래에서 뇌물제공과 같은 부패한 거래를 몰아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규칙’이 적용되는 국제자유경쟁시장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부패의 경우는 지수 및 국가순위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부패의 해소는 국가의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부패를 논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쟁력의 경우 역시 최근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 중 하나이다. 국가경쟁력에 대해 정의하는 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존재하나, 국제기구에서 측정한 국가경쟁력 점수가 무역과 같은 경제적 관계에서 국가의 기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높은 경제성장과 눈부신 국가발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국가발전의 성공모델로 칭송받던 한국이 지금은 선진국으로 도약 발전하느냐 아니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남미국가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느냐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조병훈, 2007: 1).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고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에도 그 관심이 깊어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듯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것 역시 다양한 요소와 결부된다. WEF(World Economic Forum, 2005)에서는 국제무역 및 재정의 개방성, 금융시장 발전, 하부구조의 질, 기술의 질, 기업관리의 질, 노동시장의 유동성, 사법 및 정치제도의 질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고,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5)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구축, 경제성장을 등의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공통적으로 시장지향적 효율성과 민주주의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부패는 이들 요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김명수(2006: 117)는 최근 한국 및 동남아시아 발전도상국들이 겪었던 외환위기 및 경제 위기의 극복과정을 심도있게 살펴본 결과,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국가에서는 국제기구의 자금지원과 더불어 요구한 구조개혁이 실패하였지만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에서는 경제적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국가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두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에 유사한 재정적 원조를 하

더라도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에 비해 라틴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근접권에 위치한 국가들은 상호간 문화 및 경제전반에 있어 장기간 왕성한 교류활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근접권 국가들과 타 근접권 국가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Peter Evans는 세계국가들은 발전과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국가유형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는 각 국가유형별로 상이한 운영방식 및 정치체제가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국가운영방식과 발전정도에 따라 표출되는 부패의 종류와 심각성 정도가 각기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경쟁력지수와 의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관계성이 나타나는 부패의 유형을 검토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함의를 지니는 변수들은 모든 국가간 상이성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간주해야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가내에 상존하고 있는 부패들 중에서 어떤 유형의 부패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야하는지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유형별로 나타나는 부패유형을 검토한다.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수도 있으나 반면, 각 국가에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유형과 부패유형간에 교차항을 만든 회귀모형(기초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회귀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차항만을 대상으로 그 영향력을 판단하여 시사점을 제안한다.

셋째, 3가지 모형에 대해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즉, 국가간 차이를 두지 않고 부패유형만을 독립변수로 구성한 모형(기본모형), 유형별 국가들만을 자료로 구성하여 회귀분석한 후에 비교분석한 모형(기본확장모형 1), 교차항을 포함한 모형(기초모형)의 세 분석모형을 비교분석하여 각 모형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수와 상이하게 나타난 변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형 및 국가유형에 따른 부패유형이 고려되지 않을 때와 고려할 때의 차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대한 부패의 함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eter Evans의 이론적 국가유형을 실증검토하여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부패유형과 국가경쟁력의 관계에서 과거 연구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 국가경쟁력에 관련한 연구에서 이론적 주제였던 국가유형을 실증분석 시 중요한 요소로 분석해야함을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부패와 국가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부패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검토

부패는 학자, 국가, 국제기구 간 다양한 개념과 정의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과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을 가로질러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논의의 중심은 부패가 국가나 사회발전에 저하가 된다는 점에 있는데, Botchwey가 세계은행(World Bank)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다. 그는 부패가 공급과 수요 모두에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며, 부패는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나, 공공영역의 사유화가 증가함에 따라 부패와 관련한 공사구별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이러한 부패가 확산된다면 공적 업무권한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때 발생한 다양한 유형 및 수준의 부패를 '광대한 부패(grand corruption)'로 언급한다. '광대한 부패(grand corruption)'란 고위직 정치인과 정부관료를 포괄하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부패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부패는 거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게 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Botchwey, 2000: 23). 이처럼 부패는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의 부패에 대한 큰 흐름이 국제기구이기에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 역시 가장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오늘날 전세계적 부패방지 동향의 핵심은 부패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보다 체계화·구조화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간·다자간 국제협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경제개발원(OECD)·국제연합(UN)·세계은행(World Bank)·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반부패 대책의 국제적 공조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한편, 유럽연합(EU)·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지역협력회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동협력과 구체적인 대응방안 도출, 그리고 부패와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인 국제협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Marcus-Delgado, 2003; 이상수, 2004; 이상수, 2005: 1-2). 이러한 부패의 관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국제경제개발원(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은 부패에 대한 여러 요소 중 뇌물공여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국제경제개발원은 1976년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채택했는데(박해근, 2001: 86), 이의 내용은 다국적 기업은 공직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다국적 기업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떠한 공직의 후보자나 정당 또는 기타 정치적 단체에게도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다국적기업의 부패방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곧 국제상거래에서 존재할 수

있는 뇌물공여와 같은 부분을 규명한 것으로써 국제시장과 국가정치와의 결탁으로 발생하는 국제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부패의 개념을 포용함을 알 수 있다(박상우, 2000: 80). 즉, OECD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추구를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의 부정적 기제로써 부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부패의 한 유형인 뇌물공여 문제의 해소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경제포럼(WEF)과 IMD에서도 유사하다. 세계경제포럼은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때 다양한 정부기능과 관련된 뇌물, 추가 비용 제공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부패를 다루고 있고, IMD 역시 경제부문의 뇌물과 부패만연 정도를 국가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부패방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뇌물(bribe)'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부패의 문제에서 '뇌물(bribe)'보다는 '직위나 직책'에 관심을 가지는 논의도 있다.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영국의 경제지능기구(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¹⁾와 세계시장연구센터(WMRC: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및 국제상업조직(MIG: Merchant International Group)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는 자기나라와 근무하는 나라의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서 측정하였고(PERC: 2006), 경제지능기구는 부패관료를 접할 가능성에 대해, 국제상업조직은 모든 직급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각각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였다. 직위나 직책에 대한 이들의 조사는 이 기관들의 부패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들의 조사나 자료는 부패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부패방지나 억제에 일조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위에서 언급된 기관들이 부패를 특정한 요소에(뇌물, 직책) 관심을 두고 접근하였다면, 부패를 정부(입법, 사법, 행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논의도 있다. 프리덤 하우스(FH: Freedom House),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CPI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국제투명성기구가 그러하다. 우선, 자유하우스는 '정부의 부패에 대한 대중 인식, 미디어 보도 등에 의한 부패수준'을 측정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고 및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부패방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등에 대한 부패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국가적 외압이 기관 상호간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의 암묵적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기의 <표 1>은 언급된 국제기관들의 부패측정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1)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로 국가별 경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 분석에 정평이 있는 기관이다. 세계 60개국을 상대로 분기별 정치/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한 경제환경을 분석한다. 특히 10개 분야, 70개 항목을 토대로 한 기업 환경지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표 1> 국제기관들의 부패측정 유형

기관명	년도	조 사 대 상	조사항목	응답자	및 및	비고
세계경제포럼 (WEF)	2005	조사대상국에 거주하는 기업경영층 (외국인 포함)	다양한 정부기능과 관련된 뇌물, 추가 비용 제공 정도 (수출입, 공공서비스, 공공계약, 세금 등)	10,993	117	한국 포함
	2006			11,000	125	
국제경영개발원 (IMD)	2005	조사대상국에 거주하는 중간이상의 기업경영층 (외국인 포함)	경제부문의 뇌물과 부패만연 정도	4,000이상	51	한국 포함
	2006			4,000이상	51	
정치경제위험자 문공사 (PERC)	2004	조사대상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업 경영인	자기나라와 근무하는 나라의 부패문제의 심각도	1,000이상	12	한국 포함
	2006			1,000이상	14	
EIU	2006	전문가	사익을 위한 공직남용 정도	N.A.	157	한국 포함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2005	전문가	부패관료를 접할 가능성	N.A.	186	한국 포함
Merchant International Group	2006	전문가	모든 직급 공무원의 부패	N.A.	155	한국 포함
Freedom House	2006	조사대상국 출신 또는 거주 전문가	정부의 부패에 대한 공공 인식, 미디어 보도 등에 의한 부패수준	N.A.	29	동유 럽
CPIA (World Bank)	2005	세계은행 전문가	부패실태, 반부패 노력 및 성과	N.A.	76	원조 대상 국
UNECA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2005	각국별 70-120명의 전문가 서베이	입법·사법·행정 등의 부패정도	약 2,800	28	아프 리카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2006년도 'CPI' 분석자료 인용

분명히 부패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 및 국제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로 되는 부분이며, 따라서 국제기구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는 부패척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그들의 행위가 독단적이며, 선진국 우위의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제기구들에서의 부패측정 및 부패방지 제고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국가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가경쟁력을 논의하기에 앞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국가의 역할이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 개입정도 및 통제 등의 국가역할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부패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석결과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Gerschenkron이 주장하였던 늦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정도는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 필수적(Gerschenkron, 1962; 김명수, 2006: 132)이었다는 주장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한다.

1) 국가자율성 및 국가유형

국가자율성(State autonomy)은 오랜시간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국가 자율성과 국가 역량의 개념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국가를 둘러싼 논쟁의 성과로 남겨진 '국가-중심적' 관점(state-centric perspective)에서 발전된 것이다. 이는 국가가 스스로 고유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련의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적, 국제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를 '분석의 중심'에 두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따라서, 국가를 의인화하는 '국가이성론'이나 국가를 사회에 우선시키는 '국가지상주의', 혹은 사회의 역동성을 경시하는 '국가주의(statism)'와는 차별된다(Skopcol, 1979; Evans, Rueschemeyer, & Skocpol, 1985; 권기현, 2007: 41-42).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자율성의 연구는 국가를 구분짓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왔다. Peter Evans의 경우,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이란 개념으로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정짓고, 자이르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자율성을 '약탈적(predatory)' 국가자율성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이론적으로 규정된 '배태된(embedded)' 자율성과 '약탈적(predatory)' 자율성을 양극으로 하고, 이들의 중간지점에 브라질과 인도²⁾ 등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국가자율성을 제3의 국가자율성이라 언급하며, 다국간 교차비교를 시도하였다(Evans, 1985: 12-13).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국가자율성은 특히 국가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루어져왔다. 즉, 국가자율성이란 국가가 특정 계급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 국가를 포괄하는 정치 등 상부구조 영역이 계급을 포괄하는 경제 등 토대 영역에 오로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뜻이다(Poulantzas, 1978: 15).

2) Evans는 브라질과 인도등을 Intermediate States라고 명명하고, 이들은 배태된 자율성과 약탈적 자율성의 특성이 혼재된 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Evans, 1985: 243-244).

<그림 1> Peter Evans의 국가자율성 개념도



나아가 Peter Evans는 국가자율성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로 그가 자율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적(domestic) 맥락과 함께 국제적(transnational) 맥락에서였다(Evans, 1985: 191). 그는 1985년 발표한 논문에서 중심부(Core)와 주변부(Periphery) 및 준-주변부(Semi-periphery)로 나누는 국가분류법에 의해 주변부와 신흥공업국(NICs) 등 준-주변부가 속하는 제3세계 국가군(Third world state)의 제약된 국제적 국가자율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김태수, 2006: 32). 이러한 다국비교적 시각을 견지한 Peter Evans는 자본주의 제국을 산업화된 선진국(Center countries)과 그것에 대비되는 남미제국(브라질 등) 및 제3유형(Third world countries)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군인 동아시아제국(한국, 대만, 일본)으로 대분하여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그러므로 Peter Evans의 국가유형론은 발전정도에 착안하여 선진제국(서구유럽)을 특성화하고 지역적 근접성의 관점에서 남미제국과 동아시아제국 및 아프리카 제국으로 범주화한 것이다(Peter Evans, 1985: 192).

본 연구에서는 Peter Evans의 국가유형분류에 기초해 대상 국가를 분류할 것이다. 이러한 Peter Evans의 국가자율성을 통한 분류는 국가역할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의 조절변수로서 적합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자율성 기준을 토대로 연구대상국 모두를 분류할 것이다. 분명, 각 유형별로 분류된 국가들은 각 유형별 국가자율성정도와 크게 상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선상에서 대상국을 분류한 것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Peter Evans의 국가자율성 개념을 토대로 한 분류

선진국가형	남미국가형
영국, 스위스, 덴마크, 미국, 홍콩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동아시아형	아프리카국가형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자이르 등

자료: Peter Evans(1985: 194-221)를 토대로 한 국가유형분류

2) 정치체제의 민주성

국가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 배제될 수 없는 요소는 정치체제이다. 국가의 역할은 정치체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국가역할과 관련된 연구성과들은 근대적 정치체제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주제와 긴밀히 연관된다(최경희, 2004: 14). 즉,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치체제의 개념을 논의한 학자 및 정의는 이하 <표 2>과 같다.

<표 2>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개념정의

연구자	개념정의
매크리디스(1986)	* 통치자와 피치자간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일단의 규칙·절차·협약
피쉬맨(1990)	* 정치권력 센터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으로 사고될 수 있으며,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
로우슨(1993)	* 광범위하게 말해서 국가와 사회 관계를 말하며, 특히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고 정치권력을 갖는 사람이 대중을 통치하는 원리를 결정하는 원칙과 규범, 규칙과 절차
쉐보르스키 외의 연구(2000)	*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의미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결정짓는 규칙과 관행의 체계

자료: 최경희(2004: 4)에서 인용

정치체제는 국가권력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권력의 주체를 선출하는 것'과 '권력의 작동방식'과 관련된 공식, 비공식의 원칙과 규범, 규칙과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체제는 국가권력 그 자체와 별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반면에는 '정치권력'의 선택과 작동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권력과 밀접히 연관된 것도 사실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작동방식'으로서 원칙과 규범, 규칙과 절차가 완전히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권력의 주체'는 순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성'은 확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최경희, 2004: 16).

한편, 정치체제의 민주성이 단지 국가역할을 한정짓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 요소가 내포한 보다 중요한 가치를 간과하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하는 세계국정운영지표(WGI: World Governance Indicator)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은 WGI의 지표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요소가 국가발전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임을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제하고 있다.

게다가, 박정수(2003)의 연구에서는 정치체제의 민주성은 부패방지의 전제조건으로 언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Bhargava and Bolongaita의 연구를 인용해 정부, 민

간, 시민사회 등 국정 및 사회체제의 노력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2003: 201)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정치경쟁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당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의회투표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실효성 제고 및 이해상충의 금지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체제의 민주성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시스템의 안정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정치체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안정성(stability)'의 구현은 부패방지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국가자율성과 정치체제의 민주성임을 살펴보았다. 국가의 자율성은 국가유형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론적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간 논의에서 국가 간 유형분류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정치체제의 민주성은 국가역할 형성과 관련되며, 부패와 국가경쟁력의 논의에서 역시 통제되어야 할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경쟁력의 측정

WEF에서는 1979년 Klaus Schwab교수의 주창에 의하여 국가경쟁력연구를 시작하여 IMD와 공동으로 세계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Report)를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발간하다가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이견으로 1996년부터 WEF는 글로벌 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IMD에서는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서로 독립적으로 발표하며 경쟁력연구 경쟁을 하고 있다(정진호, 2000; 조병훈, 2007).

IMD는 매년 5월 국가경쟁력을 발표하고 있다. 경쟁력분야를 크게 경제운영 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등 4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각 분야를 5개부문으로 분류하여 총20개 부문에 대하여 314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 이 중 241개 항목은 128개 통계자료(hard data: 54%)와 113개의 설문조사(survey: 46%)로 구성되어 직접반영하고 나머지 73개 항목은 보조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WEF는 국가경쟁력을 경제성장경쟁력의 3개 분야(거시경제환경, 공공기관, 기술력)와 기업경영경쟁력 2개 분야(기업경영전략 정교화, 국내기업 경영환경의 질)를 합쳐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7개 부문, 93개 항목(정성자료14개, 설문자료 79개)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F의 세계경쟁력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종속변수로써 IMD의 세계경쟁력연감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까지 WEF의 측정변수에 부패관련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측정중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WEF의 국가경쟁력 측정에서 부패관련항목이 제외되었고, 현재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세계부패바로미터가 인식측정자료임을 고려할 때, 정량자료가 보다 적게 포함된 WEF의 세계경쟁력지수가 자료로써 적합하다.

<표 3> 주요 기관의 국가경쟁력측정방식

측정기관	주요측정부문	측정대상	측정방법	경쟁력순위
WEF(2007)	거시환경 공공부문 기술부문	131개 국가	거시환경, 공공부문, 기술의 3개 부문으로 나누며, 이를 다시 8개 항목으로 평가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덴마크, 4위: 스웨덴 5위: 독일, 6위: 핀란드 7위: 싱가포르 8위: 일본, 11위: 한국
IMD(2006)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경영효율성 사회인프라	61개 국가	126개 통계자료와 113개 분야 설문자료를 분야별로 점수화	1위:미국 2위:홍콩 3위: 싱가포르 4위: 아이슬란드 17위:일본 19위: 중국 23위:말레이시아 32위: 대만 38위: 한국
IPS (산업정책 연구원,2006)	물적요소 (4개부문) 인적요소 (4개부문)	66개 국가	물적요소 및 인적요소 8개부문의 23개 하위 부문과 그 하위 275개 세부항목평가	1위: 미국, 2위: 네덜란드 3위: 덴마크, 8위: 홍콩 16위: 일본, 20위: 대만 22위: 한국, 24위: 중국
CASS (중국사회 과학원,2006)	경제성장률 수출 노동생산성 (1인당GDP)	100개 국가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노동생산성 등을 자체개발한 모형에 대입,국가경쟁력순위를 평가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일본, 4위: 프랑스 11위: 홍콩, 20위: 한국 34위: 중국

자료: 최영훈(2006: 2-3)

3. 선행연구 검토

부패를 국가경쟁력과 관련지어 논의한 것은 윤광재(2005)와 조병훈(2007)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광재는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높을수록 부패인식 수준이 높고, 부패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 역시 높다(윤광재, 2005: 71)는 연구목적을 토대로 200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의 지수와 2004년도 IMD 세계경쟁력연감의 지수를 비례관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세계경쟁력지수도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부패인식지수와 세계경쟁력지수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부패와 국가경쟁력의 관련성을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조병훈(2007)은 국가경쟁력과 부패와의 관계분석을 위해 국가경쟁력지수와 부패유형

지수를 회귀분석하여 β 값을 통해 해석하였다. 통계분석결과, 12개 부패유형에서 부패가 국가경쟁력지수에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부패유형은 기업부패였다. 이 연구가 윤광재(2005)의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있었고 국가내 부패유형 중 그 영향력 관계를 통해 좀 더 세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국가유형별로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간과하고 국가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관계를 논의했었기에 이러한 한계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상기한 두 연구는 부패라는 요인과 국가경쟁력이 상관됨을 보여주었고, 이는 부패유형을 국가경쟁력과 관련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부패유형이 국가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간과하였기에 본 연구는 국가유형을 조절변수로 두고 부패유형과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국가유형에 의해 상이해지는 부패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국가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패변수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분석모형의 구성

본 연구의 중심적인 관심은 국가부패와 국가경쟁력이 국가유형에 따라 변화된다는 점에 있다. 즉, 부패의 유형이 독립변수가 되고 국가경쟁력이 종속변수로 국가유형이 조절변수로서 선정된다. 아울러 통제변수로 정치체제의 민주성이 포함된다. 다만,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되었던 경제체제의 효율성³⁾ 국가경쟁력지수를 측정하는 포함된 변수이기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는 2007년도 WEF의 국가경쟁력점수, 국제투명성기구의 2006 세계부패바로미터(GCB), 세계은행(World Bank)의 2006 세계거버넌스지표(WGI 2006)이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IMD & WEF,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매년 가능한 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및 측정하여 점수를 부여한 자료들이다.

연구모형에 나타난 요소를 고려해 변수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한다. 먼저, 국가경쟁력 변수는 WEF의 세계경쟁력지수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WEF는 국제경쟁력을 논의하는데 있어 공신력있는 기관이며, 이곳이 측정한 결과가 국가 간 거래 및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 경제체제의 효율성은 기본생산함수를 의미하는 데, 1인당 GDP, 정부지출규모, R&D지출, 노동생산성이 포함된다(최진욱, 2006).

둘째로, 독립변수의 경우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측정한 세계부패바로미터(GCB 2006)로 정의한다. 이론적 논의에서 국정체제의 부패와 사회체제의 부패를 구분지어 살펴보고 이에 관련된 세계바로미터 측정항목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국정체제의 부패유형은 사법부패에 해당하는 사법(법원)부패와 경찰부패를 변수로 정의를 하고, 입법부부패에 해당하는 의회의 부패와 정당의 부패를 변수로 정의를 내렸다. 행정부부패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허가의 부패, 공공서비스의 부패, 세무의 부패를 각각 정의하였다. 아울러 사회체제부패는 기업부패, NGO부패, 교육부패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셋째로, 통제변수인 정치체제의 민주성은 세계거버넌스지표(WGI)의 측정한 항목인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로 선정하였다. 정치체제의 민주성이 높다는 것은 정치체제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체제의 민주성이 낮다는 점은 정치체제가 안정화되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치체제의 '안정성'이 정치체제의 민주성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변수의 정의는 이하 <표 4>에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Evans의 국가유형분류는 선진국가유형, 남미국가유형, 동아시아국가유형, 아프리카국가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세계부패바로미터는 서부유럽,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아프리카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국가들을 측정한 후 그 지역권의 평균지수를 부여하였다. 이에 서부유럽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선진국가형,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을 남미국가유형, 동아시아에 해당하는 국가를 동아시아국가유형, 아프리카에 포함된 국가들을 아프리카국가유형으로 정의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4> 변수의 정의

	요소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지수	* 2007 WEF 세계경쟁력지수
독립변수	국정체제의 부패	사법부의 부패유형	* GCB 2006 사법의 부패지수 * GCB 2006 경찰의 부패지수
		입법부의 부패유형	* GCB 2006 의회의 부패지수 * GCB 2006 정당의 부패지수
		행정부의 부패유형	* GCB 2006 허가의 부패지수 * GCB 2006 공공서비스의 부패지수 * GCB 2006 세무의 부패지수
	사회체제의 부패	기업의 부패유형	* GCB 2006 기업의 부패지수
		NGO의 부패유형	* GCB 2006 NGO의 부패지수
		교육의 부패유형	* GCB 2006 교육의 부패지수

통제변수	정치체제의 민주성	정치적 안정성	* WGI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 (Political Stability)
조절변수	국가의 역할	Evans의 국가유형 을 통한 분류	* 선진국가유형 * 남미국가유형 * 동아시아국가유형 * 아프리카국가유형

3. 분석방법 및 자료수집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Y_{(t,i)} = \alpha + \beta_1 X_{1(t-1,i)} + \beta_2 X_{2(t-1,i)} + \beta_3 D_i + \beta_4 [X_{1(t-1,i)} \times D_i] + \epsilon_{(t-1,i)}$$

국제경쟁력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가 국제 평가기관이 측정한 지수를 자주 인용하는 만큼(안국진, 2005; 최진욱, 2006: 6), 본 논문도 IMD에 의한 국가들의 2007년 세계경쟁력연감(WCY: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와 WEF에 의한 국가들의 2007년 세계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2007년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56개국을 상대로 측정한 평가항목 결과를 종합한 점수와 그 점수에 따른 순위를 발표하였고,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131개국을 상대로 측정한 평가항목 결과를 종합한 점수 및 그 점에 따른 순위를 발표하였다. 이 중, 순위(ranking) 자료는 서열척도의 성격상 개별변수의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등간척도인 개별 국가의 국가경쟁력 점수(scores)를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 $Y_{(t,i)}$ 는 t시점에서 개별국가 i의 IMD 및 WEF의 국가경쟁력 점수를 의미한다.

독립변수 중 $X_{1(t-1,i)}$ 에서 i는 t-1시점에서 국가 i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패와 관련된 벡터를 의미하고, $X_{2(t-1,i)}$ 에서 i는 t-1시점에서 국가 i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통제변수와 관련된 벡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D_i 에서 i는 i의 국가유형만을 나타내는 조절변수이며, 마지막으로 $X_{1(t-1,i)} * D_i$ 는 해당국가유형과 부패변수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국가유형에서 두드러지는 독립변수를 살펴보고자하는 것으로, D_i 가 포함된 변수는 국가유형별로 존재할 수 있는 차이를 살펴보는 조절변수를 의미한다. 위의 연구모형은 국가유형을 제외한 기본모형과 국가유형별 차이를 보기 위한 D_i 가 포함된 기본확장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2단계로 시도된다. 1단계는 주어진 변수 및 교차항을 넣어서 나온 결과값을 분석한다(기초모형). 2단계 분석은 3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첫째 독립변수, 통제변수 넣었을 때(기본모형)를 회

귀분석한다. 둘째 독립변수, 통제변수, 조절변수를 넣었을 때(기본확장모형 1)를 회귀분석한다. 셋째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 교차항 모두 넣었을 때(기초모형)를 회귀분석한다. 이렇게 3모형을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된 총 자료수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모두 포함된 53국가이며, STATA 8.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표 5>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분석유형	분석모형	분석도구 (자료수)
1) 기초모형 분석	국가경쟁력 _{i,2007} = $\beta_0 + \beta_1(\text{부패}_{i,2006}) + \beta_2\text{정치적안정성}_{i,2006}$ + $\beta_3\text{국가유형}_i + \beta_4(\text{부패}_{i,2006} \times \text{국가유형}_i)$	STATA 8.0 (53)
2) 모형간 비교분석	국가경쟁력 _{i,2007} = $B_0 + B_1(\text{부패}_{i,2007}) + B_2\text{정치적안정성}_{i,2006}$	
	국가경쟁력 _{i,2007} = $\beta_0 + \beta_1(\text{부패}_{i,2006}) + \beta_2\text{정치적안정성}_{i,2006}$ + $\beta_3\text{국가유형}_i$	
	국가경쟁력 _{i,2007} = $\beta_0 + \beta_1(\text{부패}_{i,2006}) + \beta_2\text{정치적안정성}_{i,2006}$ + $\beta_3\text{국가유형}_i + \beta_4(\text{부패}_{i,2006} \times \text{국가유형}_i)$	

자료수집은 국회도서관을 통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진행하였다. 글로벌 부패지수 2006(GCB)은 2007년 12월에 국회도서관의 전자열람실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세계거버넌스지수 2006(WGI)은 2007년 12월에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서 얻었다. WEF의 세계경쟁력지수 2007(GCI)은 2008년 3월에 국회도서관 열람실에서 확보하였다.

글로벌부패지수 2006(GCB)은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WEF의 세계경쟁력지수 2007(GCI)은 131개국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또한, 세계거버넌스지수 2006(WGI)은 72개인데, 이 세 지표에 모두 포함된 국가는 53개국에 해당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총 53개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4)

1. 기초모형5) 분석결과 및 논의

<표 6>에서 보듯이, 분석결과 정치적 안정성, 의회부패, 사법부패, 교육부패, 경찰부

- 일반적으로 유의수준의 경우, 0.1%(0.001), 1%(0.01), 5%(0.05)까지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본 연구는 국가간 연구라는 점에서 자료(sample)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유의수준을 0.1%(0.001), 1%(0.01), 10%(0.1)까지 유의한 통계치를 분석결과로 취하였다.
- 본 연구에서 '기초모형'은 국가유형에 따라서 부패형태는 달라질 것이라는 명제를 검증하게 해주는 최초의 근본모형이라는 의미에서 명명된 것이다.

패*남미국가유형, 교육부패*선진국가유형, NGO부패*선진국가유형, NGO부패*동아시아 유형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표 6> 기초모형 분석결과 요약

독립변수	β	표준오차	t	유의확률	변수유형
상수	8,047477***	2,229021	3,61	0,001	
정치적안정성	0,338147**	0,1009731	3,35	0,002	조절변수
의회부패	-0,5381231**	1,093977	-2,51	0,015	독립변수
사법부패	-0,5742563*	0,6444096	-1,89	0,072	독립변수
교육부패	-0,7427745*	0,4131004	-1,80	0,083	독립변수
경찰부패	-0,3294176	0,2333704	-1,41	0,169	독립변수
NGO	-0,0743891	0,3320171	-0,22	0,824	독립변수
민간부패	-0,1566532	0,7220913	-0,22	0,830	독립변수
의회부패*D1	10,42051	7,477578	1,39	0,175	교차항
의회부패*D2	-8,842712	11,73472	-0,75	0,458	교차항
의회부패*D3	5,443073	15,35173	0,35	0,726	교차항
사법부패*D1	0,6685972	5,101633	0,13	0,897	교차항
사법부패*D2	0,3328845	8,080333	0,04	0,967	교차항
사법부패*D3	2,773464	9,615436	0,29	0,775	교차항
교육부패*D1	-8,897393*	,8850371	-2,29	0,030	교차항
교육부패*D2	6,203807	5,008833	1,24	0,226	교차항
교육부패*D3	-7,712686	9,69774	-0,80	0,433	교차항
경찰부패*D1	4,838461	4,877299	0,99	0,331	교차항
경찰부패*D2	-2,464087*	,7258976	-2,19	0,034	교차항
경찰부패*D3	-4,495656	14,53907	-0,31	0,760	교차항
NGO부패*D1	6,831436*	3,422642	2,00	0,056	교차항
NGO부패*D2	-1,971276	4,909819	-0,40	0,691	교차항
NGO부패*D3	-1,927905**	1,498313	-2,86	0,007	교차항
민간부패*D1	-3,121539	5,134383	-0,61	0,548	교차항
민간부패*D2	-5,636374	7,590326	-0,74	0,464	교차항
민간부패*D3	11,27819	11,82029	0,95	0,348	교차항
N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53	,9031	0,8133	,31355		

* 종속변수: WEF의 GCI 2007

* D1=선진국가유형, D2=남미국가유형, D3=동아시아국가유형

***p<0,001, **p<0,01, *p<0,1

이러한 통계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상수는 8.047477이고, 유의확률은 0.001이다. 이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값이 모두 0 일때 국가경쟁력 점수는 8.047477이고, 부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상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⁶⁾. 둘째로, 모든 국가에서 모두에서 정치적 안정성, 의회부패, 사법부패, 교육부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는데, 국가유형별 교차항을 포함하지 않았던 기본모형에서 정치적 안정성, 의회부패, 사법부패가 얻어진 것과 동일하다. 이들의 베타값과 유의확률은 정치적 안정성이 0.338147과 0.002, 의회부패가 -0.5381231과 0.015, 사법부패가 -0.5742536과 0.072, 교육부패가 -0.7427745과 0.083이었다. 셋째로, 교차항을 통해 볼 때 국가유형별로 상이한 부패변수가 도출되었다. 선진국가유형에서는 교육부패와 NGO부패가 도출되었고, 베타값과 유의확률은 교육부패가 -8.897393과 0.030이고, NGO부패가 6.831436과 0.056이었다. 남미국가유형에서는 경찰부패가 도출되었는데, 베타값과 유의확률은 -2.464087과 0.034이었다. 동아시아유형은 NGO부패가 도출되었고, -1.927905와 0.007이었다. 넷째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된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계수(VIF)는 정치적 안정성이 최저 4.89이고, 교육부패가 최고 8.77이었다. 한편, 총 자료 수는 53개였고, 수정된 R 제곱은 0.8133으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지닌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부패(0.169)와 의회부패*선진국가형(0.175) 경우는 본 연구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다수의 자료가 확보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안정성, 의회부패, 사법부패, 교육부패가 기초모형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서 도출되었다. 이는 모든 국가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부패는 의회부패, 사법부패, 교육 부패라는 것이며, 정치적 안정성 역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만일 정치적 안정성이 1만큼 증가한다면 국가경쟁력은 0.338147점 상승하고, 의회부패가 1만큼 증가한다면 국가경쟁력점수는 -0.5381231점 하락하게 된다. 또한, 사법부패 역시 1만큼 증가한다면 국가경쟁력점수는 -0.5742563점 낮아지며, 교육부패가 1만큼 증가한다면 -8.897393점 낮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국가유형별로 도출된 변수는 아프리카유형과 비교해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다. 첫째로, 선진국가유형은 NGO부패와 교육부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NGO부패와 교육부패가 아프리카에 비해 선진국가에서는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중요한 부패변수이며, 교육부패가 1만큼 증가하면 국가경쟁력은 -8.897393점 하락하며, NGO부패가 1만큼 증가하면 국가경쟁력은 6.831436점 상승한다. 교육부패의 경우는 국가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봤을 때, 얻어졌던 결과인 부패변수와 동일한 결과이며 선진국가유형은 사회문화적 모든 배경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

6) 종속변수로 사용한 WEF의 GCI(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최고점수는 6.0이다. 물론 이러한 절편 값의 해석은 선형을 전제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기적인 교육투자와 부패의 방지가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덧붙여, 교육부패가 국가경쟁력에 통계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른 모든 부분이 안정화되어 있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NGO부패의 경우 부패가 1만큼 증가할 때 국가경쟁력이 6.831436점 상승한다는 통계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 상식과는 상이한 결과로 이에 대한 검증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7> 국가유형별 부패 분석결과

	선진국가유형	남미국가유형	동아시아국가유형
의회부패	×	×	×
사법부패	×	×	×
교육부패	○	×	×
경찰부패	×	○	×
NGO	○	×	○

둘째로, 남미국가유형의 경우 경찰부패가 아프리카유형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변수로 도출되었다. 경찰부패가 1만큼 증가한다면 국가경쟁력은 -2.464087점 만큼 하락하게 된다. 이론 및 시대사적 배경을 통해 남미국가유형은 치안의 문제가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결과 역시 이러한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미국가유형은 분명 경찰의 부패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초점을 두고 치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보다 진전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유형의 경우 아프리카 유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NGO부패가 중요한 변수로서 도출되었다. 기본확장모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Peter Evans는 동아시아국가 특히 한국의 경우 ‘배태된 국가자율성(Embedded State Autonomy)’으로 인해 국가의 역량과 국가경쟁력은 매우 높으나 사회의 역량과 발전정도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였다. 통계결과에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NGO부패가 1만큼 증가하게 된다면 아프리카유형과 비교해 국가경쟁력이 -1.927905점 만큼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국가유형의 경우는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NGO와 같은 사회적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Poulantzas(1978: 15) 및 Peter Evans(1985: 12-13)의 언급처럼 국가자율성은 특히 국가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루어져왔다. 더불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 국가를 포괄하는 정치 및 경제 등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 국가유형별 차이가 국가자율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곧 국가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부패변수를 살펴볼 필요성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은 국가자율성 또는 국가유형에 의해 보다 중요한 변수들을 구분지어야 한

다. 이렇게 구별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된다면 부패에 대한 이론적 의의를 구체화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모형간 비교분석결과 및 논의

<표 7>은 총 분석결과를 비교대조한 표로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기본모형⁷⁾결과 정치적 안정성, 사법부패, 의회부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정치체제의 민주성, 사법부패, 의회부패 등의 변수가 기본모형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치적 안정성의 경우 모든 분석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회귀계수는 최저 0.338에서 0.541까지의 수치를 보였다. 즉, 국가경쟁력에 통제변수로서 정치적 안정성은 0.338점에서 0.541점까지의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본확장모형I에서 이들 간의 회귀계수는 가장 높은 수치는 선진국가유형, 다음 동아시아유형, 마지막으로 남미국가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성은 국가자율성과 결부되어 논의할 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진국가의 경우 정치체제의 민주적 토대가 비교적 안정화되어있는 반면, 남미국가유형과 같은 경우는 정치체제가 다소 불안정하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기존에 제시된 논의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둘째로, 사법부패의 경우 기본확장모형I의 선진국가유형을 제외한 모든 분석모형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독립변수 중에서 국가경쟁력에 가장 공통적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이 사법부패의 회귀계수는 최저 -0.556에서 -1.288점까지 분포되었다. 특히, 기본확장모형I에서 남미국가유형은 -1.160이고, 동아시아국가유형은 -0.556의 차이를 보였는데, 치안의 문제가 국가경쟁력에 큰 요소였던 남미국가의 경우 그 영향력 및 중요성이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이론적 측면에서 사법(법원)의 부패를 국가경쟁력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경제 및 사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관련법규인데, 사법의 부패가 심하다는 것은 이러한 통제나 규제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잘 구현된 직·간접적 법과 제도는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잘 구현된 규제가 있을 경우,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Koedijk and Kremers, 1996; 최진욱, 2006: 10)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셋째로, 의회의 부패의 경우 영향력의 방향이 모든 모형에서 동일하지는 않았다. 기본모형과 기초모형I에서는 -0.782와 -0.538로서 국가경쟁력에 부(-)의 영향관계임을 나타내었으나, 기본확장모형I에서는 0.755로서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통계결과를 표출

7) 여기서 기본모형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정치적 안정성, 사법부패, 의회부패만을 넣고 기본적으로 모형화하였다는 의미에서 명명화된 모형이다.

하였다. 부정적 영향력은 -0.538점에서 -0.782점까지의 관계이고, 긍정적 영향력은 0.755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회의 부패가 낮아지면 입법과정이 투명해지고, 이에 적합하고 적실한 법률안이 채택되어 국가운영시스템에 기여를 하여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론적인 통념이다. 이 분석결과에서도 2개의 모형에서 부(-)의 관계임이 도출되었지만, 또 다른 한 분석모형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증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8> 모형간 비교분석결과 요약

종속변수 독립변수	기본모형		기본확장모형I						기초모형	
			선진국가유형		남미국가유형		동아시아유형		통합유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5,568***	0,582	5,922***	0,623	5,486***	0,324	6,278***	0,296	8,047***	2,229
정치적 안정성	0,397***	0,062	0,541***	0,084	0,407***	0,059	0,417***	0,068	0,338**	0,101
사법부패	-1,288***	0,163			-1,160***	0,156	-0,556***	0,082	-0,574*	0,644
의회부패	-0,782***	0,190			0,755***	0,184			-0,538**	1,094
민간부패			-0,241*	0,176					-0,742*	0,413
교육부패+D1			-0,182*	0,411					-8,897*	0,885
경찰부패+D2					-0,126*	0,270			-2,464*	0,726
NGO부패+D3							-0,204**	0,528	-1,928**	1,498
NGO부패+D1									6,831*	3,422
N	53		53		53		53		53	
Adj. R2	0,793		0,535		0,795		0,741		0,8133	

* 종속변수: WEF의 GCI 2007

* D1=선진국가유형, D2=남미국가유형, D3=동아시아국가유형

***p<0.001, **p<0.01, *p<0.1

넷째로, 민간부패의 경우 기본확장모형I의 선진국가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민간영역은 사실 국가의 경제적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론적인 논의를 토대로 하면 이는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다. 선진국가유형의 경우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안정화되어있기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국가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국가유형별 차이는 기본확장모형I과 기초모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두 분석모형에서 거의 동일한 변수들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진국가유형에서 도출된 변수는 기본확장모형I은 교육부패였고, 기초모형에서는 교육부패와 의회부패

였다. 공통적으로 도출된 교육부패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볼 때 현시점보다는 미래시점에서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선진국가유형은 사회경제적인 국가기반토대가 모두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현시점에서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변수 보다는 미래시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통계결과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가들의 경우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분에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부패를 해소하고 발생할 수 있는 교육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남미국가유형에서는 기본확장모형I과 기초모형 모두에서 경찰부패가 중요하게 간주해야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듯 남미국가유형은 1960년대 중반까지 개발도상국으로써 그 면모를 갖추었으나 국가 치안의 문제와 부패문제 등 내적인 요소가 국가발전의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과는 국가유형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남미국가가 자원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국가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갖추는데 경찰부패는 걸림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국가유형에서는 기본확장모형I과 기초모형 모두에서 NGO부패가 도출되었다. '배태된 국가자율성(Embedded State Autonomy)'라는 이론적 개념이 시사하듯이, 동아시아 국가유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역량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사회적 역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통계적 유의성이 두드러지게 확인된 NGO부패는 동아시아국가유형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는 NGO역량과 같은 사회적 역량을 지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박상우(2000: 89) 역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인데 부패가 정부활동에 개입하게 된다면 시장실패를 시정할 정부의 적절한 통제와 감시능력은 약화되고, 또한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계약 및 재산권 보호가 중요한데 부패로 인해 이 권리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이 약화됨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국내 및 국외 기업들로 하여금 인지도 즉, 신뢰도를 낮춤에 따라 비용상승을 불러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결국 부패로 인해 '성장기반 약화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증시하는 모든 국가들은 부패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부패의 해소를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지속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부패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며(박상우, 2000: 90), 부패가 증대되면 지하경제의 규모와 더불어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져 종국에는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아울러 Peter Evans의 연구는 국가 및 사회의 기저(基底)가 안정화되어 있는 유형을 선진국가형으로 분류하였고, 다음으로 '배태된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동아시아국가형, 그 다음으로 이들과 유사하였으나 국가개혁에 실패했던 남미국가유형, 그리고 국가가 거의 국민을 상대로 약탈⁸⁾을 한다고 여기는 아프리카 국가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렇듯 부패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력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영향력의 상호작용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연구가 주는 함의이며,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함의는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연구와 국가유형이 달라질 때 해당하는 부패가 상이해진다는 연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부패라는 변수에 대한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며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거쳐 부패라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유형에 따라 부패변수가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분명 부패의 변수들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고, 이들 부패변수가 국가유형과 관련된다면 각 국가유형에 맞는 변수들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동아시아국가는 부패변수가 NGO이며, 이러한 NGO라는 변수와 더불어 정치적 안정성이 중요한 변수로 얻어졌다는 점에서 이 변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동아시아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시대 국제사회에서의 부패에 대한 경종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유형에 대한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Peter Evans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국가유형을 구별하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론적 개념인 '배태된 국가자율성(Embedded State Autonomy)', '약탈적 국가자율성(Predatory State Autonomy)'을 규명하였고, 이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4가지 국가유형으로 구분지었다. 이후 이 이론적 개념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연구의 초점이 대부분 개별 국가들의 심도있는 부분에 맞춰졌고, 이러한 연구의 초점으로 인해 각 국가유형별 다양한 국가들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개념인 국가자율성을 다수의 국가를 통해 국가유형으로 적용하여 살펴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로, 국가의 자율성은 국가의 민주적 체제와 구별되어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국가자율성과 정치체제는 분명 상이하게 논의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국가자율성과 정치체제는 함께 연결됨을 살펴봤고, 유의미한 통계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결과에 대한 논의가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8) Peter Evans는 아프리카의 유형을 "약탈적 국가자율성(Predatory Autonomy)"로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부를 약탈 하며 사회에 기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수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론적 검증이 진행될 수 있을 수 것이다.

넷째로,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결부지어 생각해 볼 때, 동아시아국가 유형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아시아국가형의 경우, 국가경쟁력은 매우 높았지만, 선진국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NGO의 부패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고 국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의 문제와 NGO의 부패문제⁹⁾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요인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해소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자율적 역량을 강화를 통해 NGO와 같은 사회의 부패를 해소하고 더불어 정치적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시민의 자율성 강화와 역량강화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고, 한국 역시 시민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가 보다 안정적이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배경은 여전히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두고 정책을 형성·집행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 자본의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만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강한 역량을 가진 국가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패유형에 따른 국가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기여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안고 있는 바,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자료의 수(N=53)가 다소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가 통계분석의 기본 표본 수는 확보하였으나, 국가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통한 검증 및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연구결과와 정확성을 위해서 보다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변수를 보다 구체적인 요인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론적 검토 및 논의를 통해 각 변수는 국가의 부패를 가늠하는 요소들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입법, 사법, 행정 각 부분에 요인으로 결집되어 논의될 때 보다 큰 이론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변수에 대한 검증을 통한 요인으로서의 논의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셋째, 부패변수들은 국가 전체의 요소를 반영하는 거시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단순한 통계 분석에서 포착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질적연구를 통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 부패변수의 검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은 향후 문헌분석, 심층인터뷰, 사례연구 등 보다 심도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

9) 여기에서의 NGO의 부패는 단순히 NGO 조직 자체의 부패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NGO와 정부기관들과의 기금결탁으로 인한 부패 및 개발도상국의 활성화되지 못한 NGO들의 재정독립성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정부의 기부금 및 지원금 등에 의존도가 높아져 나타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형으로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를 구별하였는데, 2009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39위-5.5점)과 싱가포르(3위-9.2점)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 국가를 동일한 동아시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석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국가유형에 대해 심도있는 고찰과 실증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패연구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정책문제이다. 이는 국가혁신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지속적인 이론적 검증을 통해 중요한 인과관계의 구조들이 명확히 규명된다면, 사회적 자본과 국가혁신, 국가역량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기현(2007), 『정책학의 논리』, 박영사.
- 강상남(2003), "체계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계와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 논문집」, pp: 107-125
- 김명수(2006), "국가의 경제적 역할: 경제학의 한계와 경제사회학의 가능성", 「사회와이론」 동권 제9집, pp: 115-157
- 김 렬(2005), 『통계분석의 이해 및 활용』, 대명출판사.
- 김상헌·임주영(2002), "정부규제와 부패", 「공공경제」 제7권, pp: 31-53
- 김용세(1998),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남출판사.
- 김태수(2002), "에반스의 국가자율성 개념에 대한 연구: 착근적 국가자율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3호, pp: 27-45
- 김태진(2006), 『행정계량분석의 이론과 활용』, 대명출판사.
- 라영재·이태영(2003), "부패방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2003년도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53-166
- 박상우(2000),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경상논업」, 18(1), pp: 77-104
- 박영구(1998), "교육과 산업경쟁력", 「국제지역연구」, Vol. 2, No. 2.
- 박재완(1997), "부패와 反부패정책의 경제적 함의",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공공경제」, 2(1), pp. 96-126
- 박정수(2003), "국제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부패방지",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세미나 발표

- 논문집」, pp: 199-214
- 박해근(2001), "국제사회의 부패방지노력과 OECD 뇌물방지협약", 「경영경제」 34(1), pp: 85-108
- 윤광재(2005),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0(3), 69-88.
- 윤광재 외(200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05-01.
- 윤태범(2000),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 역할체계",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pp: 195-217
- 윤태범(2001),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역량의 강화와 시민단체(NGO)의 역할", 「지방정부연구」, 5(1), pp: 71-92
- 윤태범(2002),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의 인식: 확장의 가능성 모색", 『거버넌스의 이해』, 김석준 편저, 대영출판사
- 이헌재(2005), "주성분분석에 의한 국가경쟁력지수평가", 청주대국제협력연구원, 국제문화연구제23집, 95-109.
- 이연호(1998), "경제적 자유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pp: 77-94
- 장석기(2003), "대학원 교육의 개선과 그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해양대학논문집」 Vol. 12
- 전영평(2003),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논리, 유형, 분석", 「한국행정학회보」 제37권 제3호(2003 가을), pp: 95-116
- 정영대(1995), "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 「동향과 전망」통권 제25집, pp: 22-46
- 정진연(2005),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pp:195-219
- 정진호(2000), 「국가경쟁력: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으로 키우나」, 서울:지정출판사.
- 정용덕(2006), "거버넌스와 국가 역량", 「국정관리연구」, 제1권, pp:9-35
- 조병훈(2007), "국가경쟁력과 국가 부문별 부패와의 관계분석", 「2007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조은경(2005), "민영화와 부패: 민영화 부패: 민영화 유형에 따른 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20
- 진종순(2006),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차용진 · 이홍재(2007), "2006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대한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3), pp: 113-138
- 최경희(2004), 「정치체제 민주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동아시아 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 최영훈(2003), "정보기술, 레드테이프 그리고 부패의 관계성: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제8권 제1호, pp: 147-174
- 최진욱(2005), "제도와 부패: 홍콩 엄정공서(ICAC)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

- 학회보」 제39권 제4호(2005 겨울), pp: 326-346
- 최진욱(2006),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pp: 3-25
- Ahmadou Aly Mbayea and Stephen Golubb, (2002), "Unit Labour Cos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xports: The Case of Senegal", *Centre for the Study of African Economies* Vol. 11 pp: 219-248
- Botchway et, al, (2000), *Fighting Corruption: Promoting Good Governance* pp:5-46.
- C. Freeman, (2004),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ume 13, Number 3, pp. 541-569
- Daniel Kaufmann & Aart Kraay & Massimo Mastruzzi, (2007), *Governance Matters VI: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1996-2006*, World Bank
- Evans, Peter B, (1985), Transnational Linkage and the Economic Role of the State: An Analysis of Developing and Industrialized Nations in the Post-World War II Period, Peter Evans & Dietrich Rueschemeyer &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 Press.
- Hamilton, Nora, (1981), State Autonomy and Dependent Capitalism in Lat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2(3)
- Keynes, John Maynard,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s and Money*, London: Macmillan.
- Lasswell, Harold D, (1951), "The Policy Orientation", *The Policy Sciences: Recent Developments in Scope and Method*, Stand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sswell, Harold D, (1970), "The Emerging Conception of the Policy Sciences", *Policy Science*, 1: 3-14
- North, Douglass,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dlinger, Eric A, (1978), *On the Autonomy of the Democratic State*, Harvard Univ. Press.
- Nordlinger, Eric A, (1987), Taking State Seriously, Myron Weiner & Samuel P. Huntington eds, *Understanding Political Development*, Boston: Little Brown.
- Peters, G. & Pierre, J, (2005), "Toward a Theory of Governance: Policy Instruments and Policy Capacity," in Peters G. & Pierre J, *Governing Complex Societies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Palgrave: Macmillan, pp: 73-90
- Polulantzas, Nicos, tr, David Fernbach, (1978),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Verso.
- Jain, Arvind K, (1998), *Economics of Corrup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 Schumpeter, Joseph Alois,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 Harper